

국제학술대회
삶과 인류의 후기근대적 대전환: 동서양을 넘어

국문초록

첫째날 2013.5.20 목요일

주제1 (10:20-12:00): 포스트-바디, 인구, 인류의 재생산

Bryan S. Turner (City Univ. of New York): “포스트-바디: 미래의 인구, 경제, 사회적 딜레마”

최재천 (이화여대): “뜻하지 않은 전지구적 인간 진화 실험: 전면적인 인종 혼화와 유전자 치환의 진화적 귀결”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적 재생산 위기: 한국의 출산력 충격”

Bryan S. Turner (City Univ. of New York): “포스트-바디: 미래의 인구, 경제, 사회적 딜레마”

생활수준이 향상된 결과 선진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생각에는 우리 모두 익숙하다. 이 강연에서 나는 연관된 발전, 이른바 ‘생명연장기획’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고통을 제거하는) 치료법과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증진법을 공히 극대화하는 폭넓은 기술적 개입을 통해 생명의 무기한 연장을 약속한다. 급진적인 생물학적 노인학은 인간이 120세 이상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병과 질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약속한다. 급진적인 포스트-인간주의의 유토피아적 꿈은 죽음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설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연장기획의 결과는 포스트-바디다. ‘자연적 신체’를 대체하는 것은 합성적 신체인데, 이는 약물과 의학 기술로 개선된 뇌, 인공장기, 나노기술로 만든 기계와 컴퓨터로 보철한 인간장기의 집합체다. 요컨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는 인간과 포스트-인간이 공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포스트-인간 사회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첫째, 발본적으로 불평등할 것인데, 생명연장 기술에는 돈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아프리카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대 수명 감소는 한국과 일본의 발본적인 생명 증진과 짝을 이룰 것이다. 이주와 출산이 낮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대규모 기술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체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아시아의 경우 1.2 남짓이다), 아동의 수는 적어지고 고령자의 수는 많아질 것이다. 만약 선진 세계의 경제들이 고도기술을 요하는 생산과 구조적 실업을 향해 간다면, 현저한 세대간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90세 내외의 자녀가 한 명 정도 있지만 손자는 없는, 포스트-바디를 지닌 120세의 개인들. 그 결과는 포스트-가족, 곧 자녀는 거의 없고, 연속단혼(單婚) 경향의 초고령자가 출입통제 주거단지(gated community)에 사는 모습이 될 것이다. 효 사상이 이 사회 구조와 무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현존하는 세대들이 평균 120세까지 생존한다면, 이들은 연금과 근무 경력, 자산을 보유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셋째, 여성보다 남성의 고립 정도가 더 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초고령은 새로운 형태의 고독과 우울, 고립과 소외를 수반할 것인가? 기한 없는 실존의 권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복약'이 필요할까? 유럽과 아시아의 잉여 노인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제3세계에 노인수용체계나 은퇴도시가 필요할까? 생명연장기획이 우리에게 건강과 고령을 줄 수 있다면, 고용 문제는 기술과 무기한 고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향하는 곳은 기계가 모든 일을 하는 고용 없는 경제—맑스가 예견한, 그러나 혁명 없이 달성되는 미래—인가? 넷째, 어떤 이데올로기적이고 종교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고통과 죽음이 기술적으로 제거된다면, 전통적인 종교들은 그저 사라지고 말 것인가? 거듭되는 고통과 질병,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기독교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번뇌라는 불교의 관념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150세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은 고통스럽고 짧다는) 불행의 신학들에서 (고통과 불편, 권태에 대한 의학적 해법을 동반한) 행복의 신학들로 옮겨갈 것이다. 그 결과는 오락의 사회다. 생애주기, 인간적 성욕, 재생산, 세대적 정의, 노화, 가족 생활과 관련된 통념들 일체를 발본적으로 다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각본을 들어 엘리트들에게나 호소력이 있는 유토피아적 염원을 담은 공상과학의 예에 불과한 것으로 쉽사리 일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티안 바너드 박사가 1967년 최초의 심장이식수술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수술을 값비싼 술수일 뿐이라 일축했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줄기세포연구, 일상적인 장기이식, 나노기술, 태아수술, 성선택, 체외수정, 냉동보존술, 기타 등등이다. 인간 노화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기술 명법(technological imperative)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뜻하지 않은 전지구적 인간 진화 실험: 전면적인 인종 혼화와 유전자 치환의 진화적 귀결”

진화는 거의 예외 없이 국지적으로 벌어진다. 생물의 이동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아무리 동일한 종이라도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 서로 유전자를 섞기 어렵다. 오랜 기간 동안 격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화한 두 집단은 나중에 만나더라도 교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라져 때론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 우리 인간도 예전에는 핀란드 사람들은 대체로 핀란드 사람끼리,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끼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례 없이 다양하고 빈번한 인종간의 혼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류 역사에 이 같은 대규모의 유전적 혼화는 일찍이 없었다. 분자유전학의 발달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열등한 유전자를 정상적이거나 우수한 유전자로 치환할 수 있는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 엄청난 규모의 뜻하지 않았던 ‘실험’이 인간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유전자 치환과 인종간의 혼화로 개인 또는 국가 수준에서는 유전적으로 훨씬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집단 또는 인류 전체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매우 흥미로운 유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주제 2 (13:20-15:00): 지구화된 삶의 양식과 제도

장경섭 (서울대): “특수주의적 다문화주의: 혼인세계화의 시민권적 모순”

설동훈 (전북대): “원거리 아버지들: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버지와 ‘기러기’ 아빠”

신의항 (서울대): “고등교육의 국제화: 중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장경섭 / 특수주의적 다문화주의: 혼인세계화의 시민권적 모순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 국제결혼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이 범세계적 실존과 변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기의 현상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명백한 다종족 실체들로 변형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시작했고, 다양한 시민 그룹과 미디어, 심지어 기업들도 나름의 다문화주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 정책에 호응해왔다. 기묘하게도, 이렇듯 겉보기에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움직임들은 비판적인 학자들과 인권옹호자들, 분리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외국인신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많은 외국인신부들은 그들의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한국이 “(자신들을)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멈춰”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접근들 속에서 자신들이 자주 소외감이나 심지어 당혹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심각한 역설 속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 흐름은 (1) 외국인신부와 외국인 노동자, (2) 외국인신부와 그들이 속한 한국인 가족, (3)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들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특수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생산 노동의 착취적 조건들뿐 아니라 다문화주의 지원 정책에서의 공식적 배제(여러 불이익 중에서도 한국에 정착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영구히 부정당하는 것을 포함하여)에 의해 좌절감을 느껴왔다. 둘째, 외국인신부의 물질적·사회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대개 매우 빈곤하고 나이가 많은)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와 사회는 그들 가족의 운명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 데 있어 무능력하거나 그러한 의지는 없는 채 피상적으로 외국인신부들을 문화적으로 외래적인 주체들로 대우하는 배타적인 정책을 고안해왔다. 셋째, 외국인신부들이 많이 유입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혼혈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사회적 정서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다문화적 혹은 범세계적 주체로 재창조하려는 문화적·정치적 열망이 생겨났다. 여기에서 다문화적이라는 것은 문화적 차이들은 영원히 동결되고 반복적으로 상연되는 가운데 자신들이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열풍 아래 이 모든 분리들은 외국인신부들에게 부여된 혹은 이들이 쟁취한 시민권과 정체성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정의해왔다. 한국의 걸치레 다문화주의의 특수주의적 성격은 단순히 국가의 범세계적 지위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아니라 일종의 관리되는 범세계주의 혹은 범세계주의화를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화의 이러한 국면은 21 세기의 사회학, 특히 국가와 세계, 종족, 젠더, 계급들 사이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구조적 관계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설동훈/ 원거리 아버지들: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버지와 “기러기” 아빠

노동 혹은 교육을 위해 떨어져 사는, 두 가지 종류의 분거가족이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버지들이 한국에서 가족 없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 역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외국에서 머물며 공부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둘 다 가족들을 위해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가족,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혹은 여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신의항/ 고등교육의 국제화: 중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 패턴은 목적국과 출신국의 소프트파워와 연관되어 왔다. 2012년에는 전지구적으로 약 410만 명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이 미국과 다른 목적국들에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을 보내는 3개국 가운데 두 국가로 등장했다. 지식기반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국제적 고등교육은 관련국들의 지구적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상품이 되었다. 국제교육은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이며, 2009년 약 180억 달러, 2012년 약 14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2009년 영국에서 국제교육서비스는 228억 달러에 달했고, 다섯 번째로 큰 서비스 수출품이었다. 그리고 유학생들과 이에 딸린 사람들이 2011-12 학년도 미국 경제에 미친 경제효과는 약 218억 달러였다.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고도선진국들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보내면 국제교육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출이 본국의 고등교육체계 발전에 미칠 수 있는 효과들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갖는 여섯 가지 측면에 대해 비교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2000년 이후 학생들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경향과 변동을 조사한다. 학력 수준(대학/대학원)과 출신국에 따른 유학생들의 유입 규모를 검토하고, 학력 수준과 목적국에 따른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유출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에서의 해외대학 분교의 증가를

조사한다. 셋째, 중국과 한국에서 미국 우수대학들이 고등교육 시장을 위해 개발한 대량의 오픈 온라인과정이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넷째, 중국의 공자학당, 한국의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 등 두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해외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다섯째, 중국과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수진 구성을 박사학위 또는 최종학위를 취득한 국가에 따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실 내 교수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현 상태를 분석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이러한 측면들이 갖는 사회정치적 함의들은 교육 제국주의와 국내 고등교육 시장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연구된다.

주제 3 (15:10-16:50): 삶과 일의 새로운 (불)평등

Göran Therborn (Univ of Cambridge): “가로막힌 삶과 요절: 삶의 새로운 불평등”

Raymond Chan (City Univ of Hong Kong): “아시아의 생애주기 변화와 위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주윤정 (서울대): “후기산업사회의 인간 ‘능력’의 재편성: 장애예술운동의 가능성”

Göran Therborn (Univ of Cambridge): “가로막힌 삶과 요절: 삶의 새로운 불평등”

전근대 시대에 부자와 빈자, 그리고 통치자, 귀족, 자유민과 노예가 공존하는 것은 불평등이 아닌 차이, 즉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의 차이 등으로 간주되고 논의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와 18세기 대서양 혁명 이후에서야 이는 불평등으로, 곧 초보적/현세적인 인간 평등이라는 규범에 대한 침해로 지각되었다.

근대에 들어 최근까지, 인간 수명이 다양하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간의 타고난 운에서 비롯한 차이로 여겨졌다. 공적 담론과 관습적인 주류 정치에서는 보통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이 새롭게 접근한 결과, 이 같은 기대 수명과 건강의 차이가 인간이 만든 불평등이라는 경험적 증거가 쌓여가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사슬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불평등의 킬링필드』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 기반하여,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생명 관련 불평등의 확대에 관한 데이터를 일부 제시하되, 특히 선진 사회들에서 불평등의 확대가 나타난 점에 특별히 유의하는 한편, 가족 패턴의 변화와 연관시킬 것이다. 또 이 논문은 불평등에 대한 다면적 파악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과학과 평등주의 정치를 역학(疫學)과 사회의학, 발달심리학은 물론 최근의 도덕·사회철학과 연관지을 것이다.

Raymond Chan (City Univ of Hong Kong): “아시아의 생애주기 변화와 위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생애주기란 단계별로 맡은 바 역할과 기능(예컨대 아동기에는 학습, 성년기에는 일과 돌봄, 노년기에는 은퇴와 돌봄의 누림)이 있는 질서있는 삶의 패턴이다. 연구자들은 생애주기가 다양한 힘들—경제 구조, 고용 및 고용 정책, 특히 아동과 은퇴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 제공—에 의해 표준화·구조화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생애주기 유형은, 초기 단계에 과업이 완수되고, 단계별 이행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위험이 낮아질(또는 없어질) 것이라고 가정된다.

이런 표준화되고 전통적인 생애주기가 도전에 직면했고 ‘탈’(de-)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생애주기는 더 이상 단순하고 선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동일한 연령 집단(cohort) 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 간에 변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 가족, 일, 거시경제구조 내에서의 여러 변화들, 아울러 복지 삭감/개편의 산물이다. 또 개인화된 생애 이야기를 추구하는 흐름이 늘어난 것도 변화의 원인이다. 새로운 맥락에서의 새로운 생애주기는 서로 다른 유형의 표적에 대한 다른 유형의 위험확산에 일조한다. 종래의 위험개념이 주로 아동기와 노년기에 빈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제를 따랐다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은 다양한 생애과정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돌봄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가족, 돌봄의 의무와 고용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를 추가한다. 이런 과도기적 기간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예측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노인 빈곤을 다루는 데 더 이상 국한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들로 확산되는 불확실성의 증가를 두고 고심한다.

생애주기와 위험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제한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사회들은 서구에서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가족과 관계성의 불안정화, 여성 역할과 기능의 변화, 출산율의 저하, 일자리 불확실성의 증가, 그리고 (사회투자를 한층 강조하는) 사회정책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에서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예컨대 동아시아의 복지 제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퇴직과 연금체계는 아직 발전 중이며, 강력한 가족주의적 문화가 개인들(특히 여성들)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도화의 효과는 조절될 수 있고, 생애주기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표준화되고 전통화될 수 있다. 더 나은 수준의 복지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회적 시민권과 권리부여에 대한 강한 감각이 없다. 따라서 '재-제도화' 경로는 꽤 달라질 수 있다. 실업이 쟁점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업의 수준은 서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준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동아시아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고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생애주기는 얼마나 표준화/전통적이며, 이런 생애주기는 근래 몇 십년간 얼마나 '탈'의 과정을 겪었는가? 복지 제공이 생애주기를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하고 있는가? '탈'의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확고한 답변을 줄 수는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적·경제적 맥락을 시야에 두고 생애주기와 위험의 개념들이 아시아에 적용가능한지를 논하고자 한다.

주윤정 (서울대): “후기산업사회의 인간 ‘능력’의 재편성: 장애예술운동의 가능성”

후기산업화 사회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능력'이란 개념은 산업화 시대에 도출이 되었는데, 표준화된 노동을 수행할 능력과 합리적 의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장애/무능력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는 정상성과 소유적 개인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생산양식이 변화하고 창의적 산업이 강조가 되면서 또한 산업화 사회의 '능력' 개념에도 변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성/비정상성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능력에 대한 실험과 창조가 풀뿌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예술운동을 통해, 기존에 무능/장애로 인식되던 영역들이 새로운 미학과 감수성의 가능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새로운 미학의 창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식과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미국, 일본,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예술/사회 운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술 운동은 기존의 능력, 장애, 무능력의 개념을 변화하며, 새로운 삶의 형식과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일본의 에이블 아트, 한국의 로사이드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이런 활동의 후기산업사회의 인간능력의 재편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날 : 2013. 5. 31 금요일

주제 4 (10:10~11:50): 개인화, 친밀성, (포스트)가족

Lynn Jamieson (Edinburgh Univ.): “친밀성, 개인화, 그리고 사적 관계의 미래”

Yunxiang Yan (UCLA): “개인화에 대한 달콤한 반발력: 현대 중국에서 부모 주도적 이혼의 증가”

진미정 (서울대): “청년층 비혼 1인가구의 초상: 전이의 지연 혹은 개인화의 성취”

Lynn Jamieson (Edinburgh Univ.): “친밀성, 개인화, 그리고 사적 관계의 미래”

유럽 논평자 몇몇이 제안한 바,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들은 개인화 과정과 연결된 개인적 관계 면에서 더 강한 친밀성 쪽으로 향하는 유사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의 서로 다른 많은 지역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채택했으며, 때로 비판적으로 이를 비틀기도 했다. 중국과 남한의 학자들은 사회변동 과정이 ‘서구’ 스타일의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를 수반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디지털로 매개되는 일이 증가한다든지 점점 더 많은 관계의 측면들이 상업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면관계의 중요성과 친밀성이 약해진다는 식의 상반된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된다.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데, 개인적 관계가 사회변동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들은 거시적, 아마도 전지구적 수준의 변동의 주요 동인의 피해자일 뿐이거나 혹은 주의분산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21세기의 주요한 도전들, 말하자면 기후변화나 세계적 불황 등등에 대응함에 있어 개인적 관계는 변동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다는, 그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정말 그러한가? 대면적인 개인적 관계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계의 다른 지역과의 대화 속에서 개인적 관계를 사유하여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은 무엇인가? 미래에 관한 일상적 사유에서 개인적 관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개인적 관계는 우리의 문화적 삶과 사회구조, 그리고 우리 지구의 안녕의 미래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함께 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연구자와 더불어, 그리고 또한 이런 연구자들 없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Yunxiang Yan (UCLA): “개인화에 대한 달콤한 반발력: 현대 중국에서 부모 주도적 이혼의 증가”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 중 하나로, (교육이나 구직, 배우자 선택, 결혼, 결혼 이후의 주거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과 권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스로의 인생을 산다는 것, 이는 중국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청년들이 잘 해나갈 수 없게 되면서, 실제 삶에서 이 이상은 청년들의 손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다. 1980년생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 부모가 주도한 이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검토한 후 내가 제시하는 주장은, 위험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사회에서 재-배태(re-embedment) 기제의 결여, 사회 생활에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지배, 사회적 신뢰의 위기 및 개인적 신뢰가 여전히 점하는 중심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모 권력의 회귀와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추가적 도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사례는 개인화의 세계적 추세와 그 지역적 변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질문 여럿을 제기한다.

진미정/ 청년층 비혼 1인가구의 초상: 전이의 지연 혹은 개인화의 성취

한국 가족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모든 연령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는 모든 가구 중 23.9%를 차지하며(통계청, 2011), 이 가운데 2~30대 청년들이 37.5%를 차지한다. 전통적인 생애과정에서는 청년들은 오직 교육, 또는 취업과 관련한 이유들로만 부모와 떨어져 살 수 있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면 곧바로 2인 가구 또는 3인 가구로 전이된다. 따라서 청년기 1인 가구는 전이기 일시적인 생활 형태로 여겨져 왔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들 없이는 청년들은 가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 생활은 장기화되고 복잡해지는 것 같다. 청년들은 결혼 전에 부모 집을 떠나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1인 가구 생활의 경험과 의미는 청년들의 성별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30대 비혼 남녀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에 기초하여 청년기 1인 가구의 삶을 조명한다. 그들이 어떻게 1인 가구의 삶을 시작하고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인터뷰 결과는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1인 가구의 청년들은 시공간의 사적인 점유를 강조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이더라도 사생활을 희생하지 않는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 작은/더 빈곤한 거주 단위로 옮겨 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에게는 개인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부모와 상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애과정의 사건들을 계획하고, 자신들의 삶을 지지할 사회적 관계들을 선택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직 일부만이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다. (집세 또는 실직 상태일 때의 생활비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면 대개 부모에게 의존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성들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고, 여성들은 배우자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기를 기대한다.

성인기 1인 가구의 이러한 초상들은 장경섭과 송미영(2010)이 한국의 가족에 대해 서술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들은 생애과정의 새로운 단계를 형성하는 개인화된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관념적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장경섭과 송미영(2010)은 이러한 경향을 '위험-회피적 개인화'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개인들이 현재의 삶의 가족-관련 위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개인화된 단계들을 연장하는 사회적 경향을 의미한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족을 형성할 자원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으로의 전이를 연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기 1인 가구는 자발적이면서도 비자발적인 상태이다.

주제 5 (13:10~14:50): 포스트-가부장제, 세대관계, 개인적 삶

하정화 (서울대): 배우자 사별이 한국 노인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은기수 (서울대): "포스트-가부장제 사회로의 경로: 성별 (비)선호의 전지구적 수렴과 동아시아의 특수성"

Stevi Jackson (York Univ): "근대성/복수의 근대성과 개인적 삶: 이론적 맹점에 대한 성찰"

하정화/ 배우자 사별이 한국 노인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데이터에 근거한 선행연구는 부모의 사별이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증가와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다른 문화들에서 삶의 후반기에서의 배우자 사별이 세대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노인들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1) 배우자 사별이 부모-자녀 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 (2) 이러한 효과들이 자녀의 효도 책임에 대한 노인들의 기대와 자녀들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분석은 "노인의 삶의 질 조사"(2003) 데이터(서울과 춘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층화다단계확률샘플링)에 기초하고 있다. 기혼 노인들에 비해 사별한 노인들은 자녀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서는 낮은 수준을, 부정적 상호작용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효도 책임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은 의미 있는 조절 효과를 갖지 않는 반면, 지리적 근접성은 의미 있는 조절 요인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별은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세대간 관계에서의 긴장을 보다 더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배우자 사별에 적응하는 데 있어 노인과 그 자녀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별한 노인의 안녕을 향상시킬 것이다.

은기수 (서울대): “포스트-가부장제 사회로의 경로: 성별 (비)선호의 전지구적 수렴과 동아시아의 특수성”

가부장제는 전통적인 동서양 국가들 대부분에서 가족과 사회질서의 주요한 형태였다. 과거에는 가부장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남아선호가 거의 모든 사회들에 만연했다. 많은 사회들에서 근대화와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는 남성, 그리고 가족 내 남아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가부장제와 남아선호는 근대 들어 그 힘을 잃었다. 남아선호는 자녀들의 성구성의 균형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별 무관심과 성별 균형 선호로 빠르게 대체되어 왔다. 여전히 남성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동아시아 사회들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호의 주요한 타입으로 유지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남아선호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서구에서처럼 성별 무관심과 성별 균형 선호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최근 여아선호가 남아선호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특히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가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여아선호 증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Stevi Jackson (York Univ): “근대성/복수의 근대성과 개인적 삶: 이론적 맹점에 대한 성찰”

이 글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맥락에서 사회 변화, 개인적 삶, 젠더 관계를 고찰할 때 제기되는 몇몇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성과 친밀성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이론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의제는 개인화에 대한 벡과 벡-게른스하임의 작업과 기든스의 ‘친밀성의 변동’ 테제에 대한 대응, 특히 이에 대한 비판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생산적이었지만 몇몇 주목할 만한 사례(Evans, 2010; Jamieson, 2011 등)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럽중심적이다. 그러나 근대성에 대해 유럽중심주의 이슈를 다루는 다른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간략한 용어로) 다중적 근대성들과 범세계적 사회학에 대한 논쟁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도 젠더 혹은 친밀한 삶은 중심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 동아시아 학자들 역시 서구의 근대성 이론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도전해왔는데(Chang(2010), Chang and Song(2010), Tanabe and Tokita Tanabe(2004), Yan(2009) 등), 젠더 관계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근대성 이론가들에 대한 서구 페미니스트 비판들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덧붙여

아시아에서 근대성의 젠더화된 결과들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근대성에 대한 다른 논쟁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이론과 포스트식민주의론 같은 다른 이론적 전통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관련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분리된 학문분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 연관이 언제나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일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의 서로 다른 위치들로부터 어떻게 근대성과 젠더, 친밀성을 상상하고 이론화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서구 학계의 유럽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것뿐 아니라 서구 이론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떤 이론이 유통되고 또 유통되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관련되고 수정되는가. 또한 다른 식으로 이론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연결된 사회학들'(Bhambra, 2010)을 위해 '서구'뿐 아니라 사회 이론과 연구의 유럽적 전통을 지방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회 변화의 젠더화된 결과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주제 6 (15:00-16:40): 돌봄과 복지의 변화하는 레짐

Rajni Palriwala (Univ of Delhi): "합리성, 도구성, 감정의 뒤엎힘: 돌봄과 친밀성에 대하여"

Emiko Ochiai (Kyoto University): "아시아는 유럽의 미래인가: 아시아 돌봄 레짐의 변동"

Sven Hort (서울대 & Södertörn Univ): "후기근대 혹은 근대 사회(복지) 형성"

Rajni Palriwala (Univ of Delhi): "합리성, 도구성, 감정의 뒤엎힘: 돌봄과 친밀성에 대하여"

일반화된 상품 생산, 자본주의의 확산과 심화, 이와 맞물린 근대(유럽 계몽주의와 연결된)에 대한 열망과 함께, 시장과 가정,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은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성과 감정은 분리되어 있는 편이 서로에게 더 좋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자율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개인으로서의 시민과 자아라는 이상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철학적·사회학적 담론들은 개인이 이성, 감정의 건강을 위해, 도구성과 표현적인 것, 자기이해와 이타주의를, 각각이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는 모두 현존함이 분명할지라도, 이들을 구획화 할 수 있거나 구획해야 한다고 시사해온 듯하다.

그러나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평행적인 구별을 눈여겨 보거나, 정서라는 것이 감정의 요소와 의미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분법을 유지하는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제나 정책 결정 등) 합리적이라고 지칭된 삶의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들과 관행들을 보면 이 점이 입증될 수 있다. 더욱이, 이 이분법의 적절성을 견지하는 틀 내에서조차, 이성으로써 조절되지 않는 감정은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이자 장애를 일으키는 강박이자, 또는 테러리스트를 낳는 것으로 간주되고 경험될 수 있다. 감정의 위계제는 감정의 순수성이나 감정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성과 감정 간의 교차와 뒤얽힘, 상호의미의 창출이 가장 분명한 삶의 영역은 아마 현대에, 정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 본연의 무대로 지칭되는 곳, 즉 친밀하고 가족적이며 사회적인 영역일 것이다. 문화와 계급, 성별, 그리고 다른 단층선을 가로질러 비교를 해 보면, 도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뒤얽힘이 그 형태와 접합, 수용가능성 면에서 다양하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변이들은 그저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개념인 감정의 구조라는 견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랑과 돌봄을, 단어와 노동의 다양한 관행에서 표현되는 의미와 감정으로 바라볼 때, 이 감정의 구조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서 합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사이의 규범적 구별이 배태된 흔적이 드러난다. 상품화된 노동이 지배적이지만 무임금 돌봄노동이 유의미하게 존속하는 맥락에서는, 도구적인 것과 표현적인 것의 이분법은 후자가 사랑의 노동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발표에서 나는 도구성과 감정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실천 속에서 상호침투하는 민속지적이고 경험적인 예들을 논의하며,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이 갖는 타당성을 문제삼고자 한다. 진행 중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이 이분법의 구성 안에 있는 종족중심주의와 계급적·성별적 편향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記述)적 질문은 이것이다. 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의, 그리고 사회들과 문화들을 가로지르는 사회학적 정상과 사회적 정상은 어떤 것인가? 도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분리인가, 아니면 이들의 상호중첩인가?

Sven Hort (서울대 & Södertörn Univ): “후기근대 혹은 근대 사회(복지) 형성”

최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형태가 유럽 복지국가와 아시아 발전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국가들은 근대적인 발전복지국가로 수렴되고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영속적 휘발성 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넘쳐나며,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인간 개인은 누구인가?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발전의 종류는 무엇인가? 현 시대의 세계적인 인간적·사회적 발전에서 사회들과 국가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근대적 사회복지구성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무언가 쪽인가, 아니면 더 기본적인 인간 생존 단위들, 심지어 전쟁국가들 쪽에 더 가까운가? 이 단위들은 현존하는 인간적 복지 제도와 체계를 건설하고 강화하며 발전(재건)시키고 있는가? 나아가 이 나라들은 같은 방향, 곧 문명화 과정을 따르는 단일한 (사회복지) 근대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르고 분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연대기적으로 평행한 궤적의 사례들인가? 이 나라들은 동일한 '세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동떨어진 세계들인가? 진행 중인 동아시아 복지 체제가 존재하는가, 이 때 한국은 그 주요 사례 중 하나인가? 스칸디나비아는 자신의 복지국가를 '압축근대성' 하에서 재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시아의 패턴과 유럽의 패턴 사이에 어떤 종류의 차이들과 유사성들이 있는가?

복지국가는 유럽이 발명한 것이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동아시아와 최근에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지난 2~30년 동안, 사회와 국가의 조직에 관한 전지구적 수준의 지배적 사유양식에서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복지국가라는 관념은 이질적이었다. 전지구적 컨센서스 접근법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높은 세금, 관대한 복지혜택, 부패방지수단을 비롯한 공적 책임성의 증가 등)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바로 여기에서 가장 최근의 세계화 이론들이 다른 유형의 세속적/비세속적 사상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비교복지 국가연구에서의 가장 지배적인 연구와 만나고 있다.